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사실상 타결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 · 야당 법인세 인상 철회… 소득세 과표 5억 초과 구간 신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난 2일 사실상 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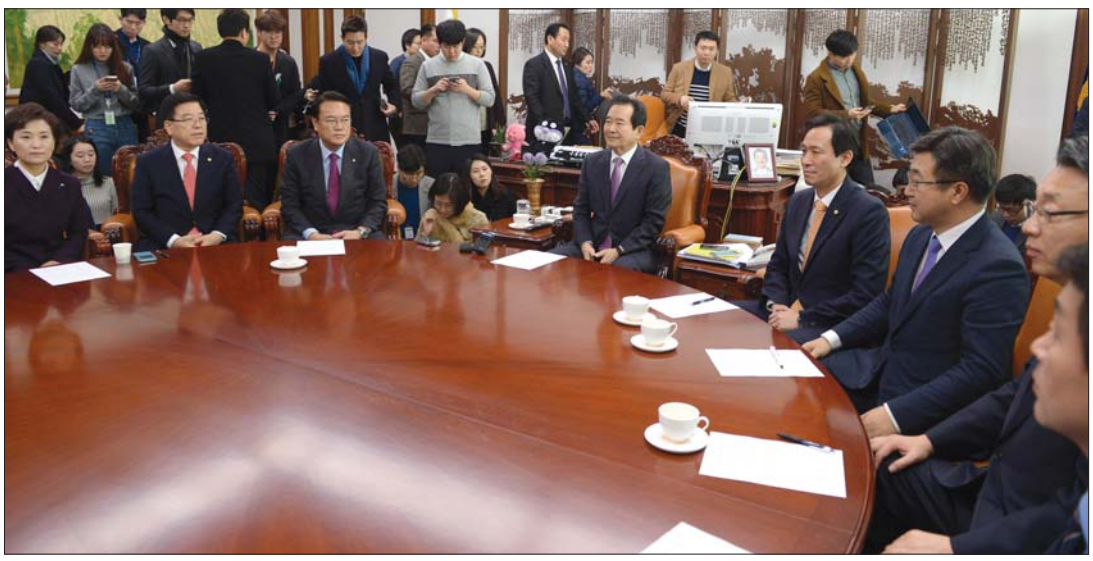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란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야당이 그간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 받기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쟁점이 돼왔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다소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타결됐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같은 합의사항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다. 우리 당의 정책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했다"며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누리과정의 경우 3년간 갈등 없이 가게 만든 게 중요하다. 앞으로 3년간은 보육현장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란 문패를 달고 들어간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 비율도 큰 틀에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 재배분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협상 타결과 관련,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은희, 국회 교문위장 표창장

최은희 의원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20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한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수상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이뤄졌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그간 한지문화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으며 특히,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전주한지문화축제 개최 과정에서는 축제가 성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최은희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지역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활동해왔다"면서 "축제 조직위원이자 도의원이기 이전에 지역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애정을 가진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비박계, '9일 탄핵' 찬반 엇갈려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찬반으로 두동강 나는 분위기다.

비박계 핵심 정병국,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여야가 대통령 퇴진 협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 일부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못박으면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회군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된 입장으로 여야협상이 안 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4월 자진 사퇴와 2선후퇴의 말씀이 있으면 여야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본인 입으로 4월 말 이전에 자진 사임하겠다는 시점을 밝히고 즉각 2선 후퇴를 밝히면 야당도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 오해가 증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할 경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 내부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부상되는 등 탄핵 정국의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병국 의원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했는데도 야당이 이를 거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에 동참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유 의원과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박계의 한 축인 이들 두 의원이 9일 탄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또다른 비박계 인사들은 '탄핵 철회' 쪽으로 기울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할 경우,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약속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9일 탄핵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상당수 비박계 의원들도 이같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탄핵 철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야3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뉴시스

시민단체 "탄핵 부결시 국회 역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9일로 합의한 데 대해 "만약 탄핵에 실패하면 광장의 국민은 국회 해산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퇴진행동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면담 자리에서 "국회는 탄핵 뿐만아니라, 박 대통령을 즉각 대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또한 "탄핵소추안을 9일에 표결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 이면에 책임 떠넘기기는 없는지가 광장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야권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후 추미애 대표 면담 자리에서는 "각 지역 대표자들은 야당이 광장의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그 보고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여의도에서 모일까, 하는 의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예산편성지침 무시한채 사무관리비 과다책정"

도의회 예결특위, 자치행정국 예산안 ·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추경안 · 변경계획안 심사

전북도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채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는가 하면 고액의 외부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없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도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은 과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명확한 추진 근거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추가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매각대금을 추정가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일 의원(군산4)은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이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는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등 몇 가지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세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실과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산출 근거가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자치행정국 사무관리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과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한민족문예제전 사업은 유사한데 수년 동안 공론화없이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 의무적으로 하는 통일 사업은 문제라며 결과를 수렴해 정보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인권 관련 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져 예산지원을 하는데 인권 교육교재 개발은 양도 많고, 인권헌장 제정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병행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철 위원(진안)은 학이시습의 날 명사 강사 수당을 1인당 125만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세금으로 강의료를 주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고액의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설명회도 증감사유가 상담부스 확대 설치, 공직준비생들을 위한 맞춤특강 실시로 공무원 지망생이 많은 현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